

주제회의  
여성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제정으로 바라보는  
광주문화예술계 변화

임인자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 2월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다. 이는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22년 9월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최초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이다.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들에게 표현의 자유 침해, 직업적 권리 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 권리 침해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성명서를 쓰고, 1인 시위를 하거나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예술계를 떠나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아예 광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까지 있었다. 이는 예술업을 종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수반하며, 삶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및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최초의 예술인 지위 권리보장 조례이지만, 제정 7개월이 지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발제를 하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

## 1.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대한민국 헌법 22조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1년 여성예술가인故 최고은 작가 사망 이후에서야 예술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법적 체계로 「예술인 복지법」이 논의되었고, 2011년 11월 17일 제정·공포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가 예술에 대한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최초로 발현된 법률이었다.

헌법에서 명시한 예술인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에 한계 드러났다. 「예술인 복지법」에는 공연 방해, 불공정 행위 등 검열 및 블랙리스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고를 받아 시정조치하는 주체가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검열 및 블랙리스트 문제와 같이 청와대와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며, 국가가 그 범죄의 주체일 때, 예술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드러난 취약한 예술인의 지위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 발생시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데,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는 예술인 실태조사결과 2018년 기준 전업예술인 57.4% 중 76.0%가 프리랜서였고, 2020년 기준 전업예술인 중 78.2%, 겸업예술인중 72.2%가 프리랜서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성희롱 및 위력에 의한 성폭력 발생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벌어진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예비예술인 역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따라 예술인들은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운동을 벌였다. 2019년 4월 19일 최초로 발의되었던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가 들어선 이후 2021년 9월 24일에야 제정되었음. 이는 헌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73년이 지나서 우리 헌법 조항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2.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배경 및 과정

여기에는 광주 예술가들의 노력도 보태졌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있었던 부조리 사태를 고발하고 나선 예술인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2020년 광주시립극단에서 <전우치 comeback with바리>라는 작품에 참여한 조연출과 오디션을 통해 참여했던 배우들이 광주시립극단 연출 및 무대감독이 저지른 연습 중 안전사고, 계약지연, 불공정계약 중용, 갑질, 성희롱 등 잘못된 일 앞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광주의 예술인 및 시민사회가 응답하여 광주시립극단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등이 발족되었다. 이들은 <작품별 단원제>라는 기형적 형태의 고용형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광주전남고용노동청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광주옴브즈맨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과를 받기도 하였다.<sup>1)</sup>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즉시 광주인권옴브즈맨에 사건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주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모두 입회하여 공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연습도중 일어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는 등 사건 발생시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함을 드러냈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어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광주시립극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광주시립극단에서 연출, 무대감독 등 정규직 상임단원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힘의 위계가 해결되지 못했고, 작품별 단원에 대한 불평등한 고용 구조 형태도 바뀌지 않았다.<sup>2)</sup>

또한 2022년 6월에는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피해생존자들

1) 임인자,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무엇이 달라지나」, 《창》 59호, 2022년 12월, 8쪽

2) 임인자,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제도화의 출발: 조례 제/개정 및 민관 TF 구성」,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광주광역시 시의회, 2022년 7월 8일, 광주광역시시의회, 33쪽

은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한 연극인들이었고, 극단의 대표, 연출이자 예술강사로 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광주연극협회 임원 등을 맡고 있던 자들이었다. 위계와 위력에 의해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이 일어났지만, 고통 속에서도 말하지 못했고, 연극계에서는 2차 가해가 만연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연극계를 떠날 수 밖에 없었음.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갔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목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에도 여전히 만연한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2019년에는 모 단체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에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였다. 단체 대표자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성희롱 문제에 있어 단체 대표가 대응해야할 의무사항이 있었지만,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였지만, 지역으로 가는 변호사 교통 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면 면담조차 할 수 없었다. 광주에서의 대응 체계 부재, 중앙 중심의 예술인 권리 침해 대응 등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다른 업계로 떠나야했으며, 광주를 떠났다. 결국 광주에서 예술인 피해구제를 위한 창구가 없었던 것이다.<sup>3)</sup>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해결대책위원회 등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문화재단 등의 노력을 통해 2021년 2월부터 광주문화재단에 예술인보듬소통센터가 만들어졌다.<sup>4)</sup>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와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상해보험> 당연가입(2021년 12월)이 명시되어 광주에 거주하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명시했던 것처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예술인복지법」과 그 법률체계로서의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예술인 정의 등의 문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조사권한, 독립적 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1년 7월 8일에는 광주광역시 시의회에서 <제100차 정책(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단 한번도 설치되지 않았고,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던 사실이 지적되었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3) 임인자,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으로 함께 “존중”하고 함께 “지속”하는 문화도시 광주에서 살고 싶다>,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2021년 6월 24일)

4) 광주문화재단 조직 개편...예술인 보듬·소통센터 신설, 2021년 2월 8일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8\\_0001334135&cID=10701&pI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8_0001334135&cID=10701&pID=10700)

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으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TF설치’를 제안하였고, 광주광역시 김나운 당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TF 설치가 바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문제 및 광주시립예술회관장의 임명 문제로 2021년 10월 15일 광주민예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시립극단부조리문제 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당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TF설치가 다시한번 요청하였고,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실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논의가 진전되었다. 그리고 긴 논의 끝에 2022년 1월 1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협치 TF>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그리고 예술인 집담회와 공청회 등이 열리며 민관협치 TF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로 2023년 1월 17일까지 1년의 활동이 이어졌다.

### 3. 여성예술인의 불평등 문제 분석 및 환경평가와 이행의 중요성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광주에서 거주하는 예술인과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조례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자 했다.<sup>5)</sup> 한편으로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8조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조례로서 처벌이 아닌 권리구제로서의 보장의 의미를 반영해야함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발생 후 개입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예술활동 환경과 예술계 구조 변화가 시급함을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예술계의 착취와 폭력 문제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예술계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예술대학, 지원제도, 각종 공모, 등단방식과 노동환경, 의사결정 등에서 복합적으로<sup>6)</sup>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뿐만 아니라 권리보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5)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복리와 관련되어 있을 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에서 판시된 것이다.

지이다. 따라서 처벌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환경평가와 실천이 중요하다.

## 1) 예술계의 성별 불평등 상황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에서 연구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인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드러난 예술계의 성별 불평등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2019년 예·체능계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약 5%p씩 높고, 2019년 기준 예·체능계열 취업률의 성별 격차(5.5%p)는 자연계열(7.0%p)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20·30대 여성예술인은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전업 예술인 비율이 낮고, 작품 발표 횟수도 적으며,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은 더 많이 하지만 계약 건수와 계약 체결 금액은 타 집단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20·30대 여성예술인은 전반적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체 예술인 평균보다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시간제 형태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비율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때, 20·30대 여성예술인은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개인 수입이 전체 예술인 평균(1,281만원)보다 낮을 뿐 아니라, 같은 여성예술인 내에서도 60세 이상 연령대 집단 다음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 여성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평균 개인 소득(920만원)은 남성예술인 평균(1,505만원)의 60%에 불과한 가운데, 연령대별 예술활동 평균 수입은 40대(1,754만원), 50대(1,432만원), 30대 이하(1,246만원), 60대 이상(860만원) 순으로 나타난다.

미투운동 이후 실시된 여러 인권 실태조사에서 일반 사회 영역보다 문화예술계 내 성불평등이나 성폭력 위험 정도가 더 심각할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성희롱·성폭력의 피해대상이 문화예술영역에 갇혀 입문하였거나 입문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6)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 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48쪽

## 2) 예술계내 성차별과 불평등 사례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에서 연구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인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요역할에서 여성배제, 교수가 신체노출강요, 낮은 보상과 과도한 업무, 지역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안전망 취약, 면접심사에서의 성차별, 성인지 관점의 소통 부재 등 여성예술인이 겪고 있는 예술계내 성차별과 불평등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은 다 여자밖에 없고요. 의상 소품도 다 여자밖에 없어요. 무대는 다 남자밖에 없고요. 조명도 여자가 한 명 있으면 다 남자고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거를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대는 당연히 힘드니까 남자가 해야 지라고 하는데, 사실 연습이 끝나면 다같이 내려가서 무대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하다못해 나무 같고 잉(기계 소리)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숙지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들(여학생들) 내려가면 시키는 건 잡일, 청소, 약간 이런 류. 사실상 그렇죠. 그냥 잡일인 거죠. 그 외의 일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시키지를 않았고.

〈주요역할에서 여성 배제 사례〉<sup>8)</sup>

3학년 때 에쿠우스라는 작품을 했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 연기전공을 한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여자 중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뭔가 그 무대에서 내가 옷을 벗고 이걸해야 된다고? 정말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때는 교수님은 이제 왕,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구조에서 살았어서, 그걸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학기에 연극을 안 했어요. (...) 아, 연극영화과 가면은 여자애가 옷 벗고 연극한대, 소문이 나서 군사학과 애들 막 보러오고. 남자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객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 처음에는, 교수님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했는데, 그건 예술이야, 그냥 니가 스트레칭 하듯이 뭔가 행위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해서...

〈교수가 신체노출 강요 사례〉<sup>9)</sup>

7)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 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참고

8)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 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85쪽

9)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 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87쪽

연습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공연을 이틀 하면, 처음에는 이틀에 대한 수당도 없었고 그 공연 하나에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줬던 경우도 있고, 5만 원도 줬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조금은 페이를 챙겨줬는데 거기서 5만 원 정도 더 챙겨주는 경우. 그리고 한 4-5일 공연해도 일이 십만원 정도, 수당이.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페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불합,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20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130만 원을 페이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수당이 70만 원이었고, 근데 월요일(에서) 금요일 한 시부터 '아홉 시 근무. 공연이 있으면 주말은 무조건 풀. 평일에도 아홉 시 퇴근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었나, 이럴 정도로. 공연 있는 날은 새벽까지. 더 일찍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페이 문제가, 이게 안 되는거예요. 저는 70만 원에 공연수당은 따로 받았는데 그래도 많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늘.

〈낮은 보상과 과도한 업무 사례〉<sup>10)</sup>

서울□□□□□ 쪽에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제명당하신 평론가분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아직도 활동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수업하는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지역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활동이 유지가 된다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 지역을 바탕으로 내가 자생하고 내가 커간다, 내가 활동을 한다라는 게, 나는 좀 불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죠.

〈지역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안전망 취약 사례〉<sup>11)</sup>

어떤 사업이 돼서 인터뷰 심사를 가면은, 여자가 이걸 할 수 있겠어, 여잔데? 아시바 열네조 가져와서 이층까지 세우고 뭘 하겠습니까.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뭐 남자팀이 있어? 아니요,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 아시바 세트 [를 설치하는] 그 공연 인터뷰 (면접심사)를 갔는데. 무대 크루가 있냐, 아니요, 저는 저하고 팀원들이 있습니다. 팀원도 여자가 비율이 더 많거든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부터 하고, 되게 좀 안 좋아했어요. 왜 굳이 그런 (장애, 성소수자 등) 내용을 담으려고 하냐. 그래서 참... 이런 데서부터 뭔가 여자들은 충을 한 발 맞고 심사를 받는 느낌이었어서. 진짜. 같이 여섯 명이 들어가서 뭐 남자여자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뭔가 시비조로 안 하는데 괜히 여자들한테는, 쓰음, 하...이런 뉘앙스나, 쓰음....저거를...이런 거, 불편했던 것 같아요.

〈면접심사에서의 성차별 사례〉<sup>12)</sup>

10)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02쪽

11)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07쪽

12)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



또한 지역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10년 이상 지역예술계에서 활동한 예술인이 ‘내 주변에서는 그런(성폭력 경험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목격하고, 언론, SNS 등을 통해 상당수의 사건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접하며, 지역에서는 성폭력을 ‘아예 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역에 조성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sup>13)</sup> 이는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이며,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의 피해 생존자 역시 2018년 미투운동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연극계의 인사가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가족같은 사이다’라는 말을 전해들으며 결국 연극계와 광주를 떠나게 되었던 일도 존재했다.

### 3) 예술계 불평등 요소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및 대처

2005년 예술 창작/작품 분야 여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여성으로서 받은 불이익의 경험 내용 중 평균 응답률보다 높은 항목으로 ‘작품상 수상시 남성을 우선으로 한다’, ‘여성작가의 표현은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공연시 캐스팅할 때 남성을 우선으로 한다’, ‘오디션이나 단체에 시험 시 절대적으로 남성이 유리하다’, ‘작품 활동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다’, ‘남성이 일을 더 잘 할 것이라는 편견’, ‘수상과 관계되는 대형전시에서 남성을 우선으로 한다’, ‘가사활동 때문에 작품 활동에 시간 제약이 많다’, ‘소속단체의 리더를 남성우선으로 한다’, ‘연출의 편협성’, ‘남성들의 인맥형성에서 소외된다’, ‘대부분 임원이 남성이라 담합과 판단에 의해 평가한다’ 등이 있었다.<sup>14)</sup>

또한 2016년 실시한 전 국민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 피해 발생은 0.4%지만 예술 분야는 7.4%고, 스토킹 피해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0.9%지만 예술 분야는 11.5%로 조사됨. 이외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성추행 피해는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10.7%지만 예술 분야는 2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예술 분야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또한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결과 발표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57.7%와 남성 응답자의 6.8%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up>16)</sup>

종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07쪽

13) 독립미디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정책연구-최종보고서-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27쪽

14) 류정아 외(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 문화관광부, 281-282쪽

15) 이미정 외(2019),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25쪽

2017년 ‘영화계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상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영역에 갇혀 입문하였거나 입문을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입문 단계 피해자가 31.0%로 가장 높고, 프리-프로덕션 단계 25.2%, 프로덕션 단계 22.3%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남성 상급자’가 63.2%로 권력을 가진 상급자 남성이 성희롱·성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문제라고 느꼈지만 참음’이라는 응답이 46.3%, ‘모른 척 하면서 살짝 피함’이 33.4%로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함’과 같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적극적 대처는 12.2%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의논하거나 영화계 내부기구에 상담이나 제보하여 공적 해결을 모색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는데, 피해자가 공적 신고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sup>17)</sup>

2019년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남성 7.9%, 여성 46.8%)가 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해자는 선배 예술가가 가장 많았고, ‘교수, 강사’가 그 뒤를 이음. 성폭력 피해자 중 31.1%는 피해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59%), ‘그 사람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36.6%),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라고 응답함. 성폭력 피해자의 2.2%만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2.0%),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46.6%), ‘공연예술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45.6%)로 나타났다.<sup>18)</sup>

2018년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영화인들은 성별 직무분리와 성별 임금격차,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소외와 배제, 남성이라는 표준과 규범으로 인한 타자화, 임신·출산 등 여성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이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중심적 권력과 문화에서 비롯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 전반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영화현장의 특수성’ 논리는 영화계의 성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를 비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9)</sup>

16)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14쪽

17) 이나영 외(2021), 2019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52쪽

18) 박근화 외(2019), 공연예술분야 성(性)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9) 김동식 외(2018),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xiii

2019년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벌, 지연, 사제 관계 등의 인맥이 중요하다’에 대해 70.1%가, ‘예술인들은 외모나 성적인 매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에 64.5%가, 그리고 ‘예술계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지만 연출 및 감독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에 대해 58.7%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었다.<sup>20)</sup>

2020년 문학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청탁에서부터 문예지 작품 게재와 보상, 문학 출판 계약에서 인세 지급, 공모전과 문학상 선정이라는 모든 과정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여성과 젊은 세대,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 피해가 적게 발생하고 이익제기 및 수정 요구 활동, 노동자로서의 인식 및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 기타 문학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심사권력과 지면권력, 그리고 자신의 제자에 대한 위계 권력, 인세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심사와 지면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앞세운 성추행과 성폭력, 자본강탈 사례도 수집되었다.<sup>21)</sup>

2021년 전통공연예술계의 현실을 진단한 글에서는 ‘도제식 위계 구조’가 편만한 가운데, 입시와 대회 비리가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하며 대학교수와 문화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의 영향력 또한 건재하다고 지적함. 또한 가부장제의 잔재가 깊숙이 남아있어 남성이 많은 분야든 적은 분야든 남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여성연주자들은 이유 없는 차별을 받기 일쑤며, 젠더권력으로 인한 폭력이 내면화되어 폭력상황에 노출되어도 인지를 잘못 한다고 비판하였다.<sup>22)</sup>

### 3) 문화예술계 기관 및 단체, 작품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남성 대표성

2018년 국내 문화예술분야 지원 관련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의 종사자 및 직급별 구성원 성비를 살펴보면, 총원 대비 여성 종사자 비율이 50% 이하인 기관들이 주를 이루며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예술기관 여성종사자 현황 (단위: %)

20) 박근화 외(2019), 공연예술분야 성(性)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1쪽

21) 공병훈 외(2020),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 백소망(2021), "전통공연예술의 공정생태계 - 흐름과 진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네이버 포스트 <예술의 향기>, 2021.12.10

기관명	총원 대비 여성 비율	무기계약직 여성 비율	고위직 여성 비율 (3급 이상, 정무직 등)
문화체육관광부	47.0	(파악 불가)	0.0(정무직) 0.0(국장급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9.0	58.0	0.0(3급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45.0	54.0	0.0(2급+위원 이상)
예술인복지재단	56.0	(파악 불가)	9.0(3급 이상)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9.0	74.0	14.0
한국콘텐츠진흥원	44.0	61.0	16.0(G2급 이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3.0	71.0	18.0(선임 이상)
예술경영지원센터	78.0	(파악 불가)	28.0(3급 이상)

출처: 장현선 외(2020),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93쪽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더욱더 낮는데, 2018년 국내 예술기관 192 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장 192명 중 여성 기관장은 20명으로 여성비율은 10.4%로 나타남. 시각예술분야(미술관 등)와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기관장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역시 문화예술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표] 예술기관 직급별 여성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세부 구분 (장르 or 지역)	전체 기관장(명)	여성 기관장(명)	전체 기관장 중 여성 비율(%)
전체		192	20	10.4
중앙정부 산하	문화예술 일반	23	4	17.3
	시각예술(미술관 등)	17	2	11.7
	공연예술(복합 포함)	11	2	18.2
지자체 산하	서울/인천/경기	68	8	11.8
	충청도	14	2	14.3
	전라도	16	1	6.3
	경상도	26	1	3.8
	강원/제주	16	0	0.0

출처: 장현선 외(2020), 성평등 예술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93쪽

또한 예술지원의 심사 및 수혜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성별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는 심사위원 및 선정자에 대한 성별·연령별 비율이 발표되고 있지만, 광주문화재단 등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 역시도 전무하다.

#### 4. 나가며 :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시장의 책무 그리고 현재 아무것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광주광역시의 태도와 문제

2023년 2월에 제정공포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었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접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 검열 금지, 예술인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책무로 명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및 피해구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하도록 명시되었다. 또한 시장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책무의 명시는 광주광역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며,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의 집행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도, 영향평가도, 지원계획도, 심의위원회도, 권익지원센터도 그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그 어떤 것도 이행되고 있지 않아 필자를 포함 여전히 예술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예술의 문화예술계에서의 많은 성별 불평등 문제 결국 생존과 존엄의 문제 앞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들었다는 자랑만 앞세울 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여러 불평등과 취약한 안전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모두 광주광역시가 언제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향후에도 성별 영향 평가 및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와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 절박함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광역시에는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